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

충북의정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2018. 11. Vol 255



충청북도의회

<http://council.chungbuk.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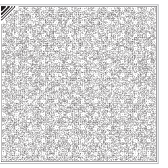
그믐

그에게도 별이 빛나는 밤은 있었다
살아 누구 못지않게 어두웠으므로
스스로 보여주지 않은 것과
남들이 채 보지 못한 것까지 합치면
그 밤하늘의 별들은 유독 반짝일 수밖에 없었다
별들이 반짝이면 반짝일수록
그는 더욱 칙흑처럼 어두워 그의 생전에는
누구 하나 그의 그림자도 보지 못하였다
그가 죽은 뒤에도 별이 빛나는 밤은 있었다
별들은 언제나 다투어 반짝이고
별들이 반짝이면 반짝일수록
마침내 밤하늘엔 어둠이 모자라게 되었다
등갓을 잃은 별빛들은 지상으로 내려오지 못했다
깊이 감추고 널리 어둡다가 그가 떠난 뒤로는
모든 밤하늘의 전설들이 하얗게 말라버렸다
누구도 남의 밝음만큼 스스로 어둡지 않았으므로
세상에는 한동안 어둠도 밝음도 없었다
그때 모두들 그를 그리워하였다



김 하 돈

- 1997년 『실천문학』 「짐승」 외 2편 발표로 등단
- 『마음도 쉬어가는 고개를 찾아서』, 『푸른 매화를 보러가다』, 『그 산맥은 호랑이 등허리를 닮았다』, 『단재 기행』 등 발간
- 2013년 단재 신채호선생 순국 77주년 추모 헌정시집 『광장을 꿈꾸다』 기획·출간.



충북의정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2018. 11. Vol 255

Contents



연하엽구름다리

연하협구름다리는 충청도양반길과 산막이옛길을 이어주는 트레킹 코스에서 아주 중요한 다리로 길이 167m 폭2.1m의 현수교 형식 출렁다리이다. 다리를 건너는 스릴과 과산호를 감상하는 즐거움이 있는 곳으로 늦가을의 정취를 물씬 풍겨내는 산들과 푸른 호수가 어우러진다.

사진제공 / 장광동 사진작가

- 02 | 제367·368회 정례회 및 임시회 주요내용
- 04 |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지원·KTX 오송역 활성화 특위 구성
- 05 |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건의문
- 06 |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촉구 결의대회
- 07 | 제11대 의회 100일 성과
- 08 | 국제 우호교류 활동
- 09 | 교육위원회 해외연수
- 10 | 각 상임위원회 활동
- 17 | 대집행기관 질문
- 18 | 제367·378회 정례회 및 임시회 주요처리의안
- 20 | 5분 자유발언
- 26 | 의정활동 이모저모
- 28 | 의원논단

- 발 행 일 : 2018년 11월
- 발 행 인 : 충청북도의회 의장 장선배
- 발 행 처 : 충청북도의회
- 구독신청 : 「충북의정」 구독을 희망하시는 도민께서는 상기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 (우.2851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 전 화 : (043) 220-5123
- F A X : (043) 220-5119
- 홈페이지 : <http://council.chungbuk.kr>



충청북도의회는 9월과 10월 제 367회 정례회와 제368회 임시회를 각각 열어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지원 및 KTX오송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제367회 정례회·제368회 임시회

충북도의회, 민생입안 처리 · 지역현안 해결 앞장

특위 구성·지역현안 건의문 채택 등 활발한 의정활동 펼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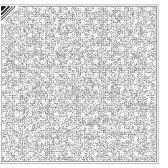
충북도의회(의장 장선배)는 9월과 10월 각각 한 차례씩 정례회와 임시회를 개최해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원발의 조례안, 충북도지사와 충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안건들을 심의·의결했다.

또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촉구 결의대회’와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지원 및 KTX오송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조기 추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도의회는 9월 5일부터 9월 19일까지 15일간 진행

된 367회 정례회에서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의 건」을 의결하고 「충청북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조례안」 등 총 2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개회 첫날인 9월 5일 실시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 367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고 충북도지사와 충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



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청취했다.

이어, 박우양·하유정·임영은·오영탁·박병진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정 및 지역현안 사항들에 대한 시정과 개선을 요구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과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결산안' 등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했다.

9월 19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충청북도 중소기업 수출촉진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충북도지사와 충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과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등을 의결했다.

이어, 최경천·육미선·허창원·이옥규·윤남진·이수완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지역과 사회적 문제에 대한 조속한 지원과 관심을 촉구·건의했다.

도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한 정책

대안 제시와 도민 삶의 질 향상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연구 활동을 시작하는 등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이 눈길을 모았다. 연구 활동으로는 '단재사상 및 충북 독립운동사', '충북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체계 혁신방안', '충북 성인지예산제도 활성화방안' 등이 진행 중이다.

도의회는 또, 10월 10일부터 10월 24일까지 15일간 제368회 임시회를 열어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실시하고 '충청북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 등 1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충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지원 및 KTX오송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연철흠 위원장 등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특위는 2020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특위의 활동은 KTX세종역 설치 저지와 오송역 활성화 및 광역교통망 구축 등 정책대안 제시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또, 국가발전 전략인 강호축 개발의 핵심 사업으로 부상한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조기 추진을 위한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건의문'을 채택해 청와대, 국회의장, 국토교통부장관 등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10월 10일 실시한 제1차 본회의에서는 박문희 의원이 대집행기관질문을 실시해 도지사를 대상으로 '도내 학교 무상급식과 친환경 식자재 구입 지원'에 대해, 교육감을 대상으로 '친환경 식자재 구입 확대 및 도내 고교 학력수준 향상'과 관련된 사항들을 조목조목 물었다.

이어, 육미선·연철흠·박성원·연종석·오영탁·이상정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각종 현안에 대한 개선과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개회 마지막 날인 10월 24일 실시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충청북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조례안」 등 1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충북도지사와 충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안건들을 의결했다.

또, 오영탁·이상식·이상욱·송미애·이옥규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도정과 교육시책에 대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했다.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 지원·KTX오송역 활성화 추진

충북도의회 특별위원회 구성, 2020년 6월까지 본격 활동 돌입



충북도의회는 10월 24일 제368회 임시회에서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지원 및 KTX오송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지원과 추진활동에 돌입했다.

충북도의회는 10월 24일 제368회 임시회에서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지원 및 KTX오송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번에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충청권 공동발전을 위한 광역교통망 구축 및 그 연장선에 있는 충북선 고속화 사업 조기 건설 △충청권 공동발전과 세종시 등에서 주도하고 있는 KTX세종역 설치 재추진의 부당성 홍보 △세종시 관문역인 KTX오송역의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해 출범했다.

선임된 특위 위원은 9명으로, 위원장에 연철흠 의원이, 부위원장에 박성원 의원이, 위원으로 박문희·연종석·이상욱·이상정·이옥규·정상교·하유정 의원이 각각 선임되어 2020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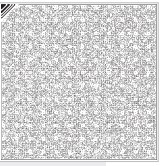
앞으로 특별위원회는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한 광역교통망 건설 지원, KTX오송역 활성화 및 접근성 향상 방안 모색, KTX세종역 설치 저지를 위한 제반활동 등에 역점을 두고 활동하게 된다.

구체적인 활동방향은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이 수도권과 연결되지 않고 낮은 경제성으로 정부의 예비타당

성 통과가 불투명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이를 조속히 건설하여 강원·호남간 끊어졌던 인적·물적·문화적 교류를 증가시키는 물론, 남·북 평화의 축으로 발전시켜 유라시아로 가는 꿈의 실크레인으로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KTX오송역 활성화’는 그동안 KTX오송역이 2010년 11월 충북도민의 전폭적인 관심과 인근 충청권 주민들의 지지 속에 개통되어 이용률이 매년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 왔음에도 세종시가 7월 16일 한국철도시설공단과 ‘KTX세종역 설치 타당성 재조사’를 위해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열면서 지난해 낮은 경제성으로 불발된 KTX세종역 재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KTX세종역이 신설되면 충청권 갈등과 막대한 예산낭비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충청권 광역교통망 건설 등 KTX오송역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위는 이를 통해 KTX오송역 활성화 및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등 강호축 개발을 조기 추진하여 실질적인 충청권 공조발전 및 강원·충청·호남을 잇는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구

강호축 개발 및 국가균형발전, 남북교류의 핵심사업 강조

충북도의회는 10월 24일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 건의문’을 채택해 청와대, 국회의원,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에 전달했다.

도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은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강원과 충청, 호남을 연결하는 초광역 국가발전 전략인 강호축의 핵심으로 충북선을 고속화하여 국가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라며 “(그러나)지난 2016년 6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 2016년 12월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여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충분한 경제성 확보의 어려움으로 예비타당성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도의회는 또 “경부축은 국가산업과 국민생활의 대동맥으로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성장과 국민의 풍요로운 삶을 견인해 왔으나 국가의 모든 자원이 지나치게 경부축에 쏠림으로 인해 심각한 국토의 불균형적 개발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이와 함께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됐으나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강호축의 개발은 지역간 인적·물적·문화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며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견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충북도의회는 163만 도민의 염원을 담아 강호축 개발, 국가균형발전, 남북 교류의 핵심인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줄 것을 간곡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건의문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은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강원과 충청, 호남을 연결하는 초광역 국가발전 전략인 강호축의 핵심으로 충북선을 고속화 하여 국가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강호축 개발의 핵심인 충북선철도고속화는 남북의 철도망 연계는 물론, 시베리아 횡단철도·만주 횡단철도와의 연결을 통한 유라시아 대륙 진출의 교두보가 될 것입니다.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은 지난 2016년 6월 제3차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 2016년 12월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여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충분한 경제성 확보의 어려움으로 예비타당성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포함돼 있습니다. 강호축 개발은 고속철도망 구축으로 기존 경부축 중심의 국토불균형 발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의 충청권 핵심사업입니다.

따라서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도 경제성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과 국토교통망(강원~충북~호남) 완성 차원에서도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충북도의회는 163만 도민의 염원을 담아 강호축 개발, 국가균형발전, 남북교류의 핵심인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줄 것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2018년 10월 24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지방분권은 시대적 요구...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촉구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 역할 강조



충청북도의회는 10월 10일 도의회 현관 앞에서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등 지방분권형 개헌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충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등 제도개선 및 지방분권형 개헌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10월 10일 실시한 제36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의 종료 후 지방분권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갖고 지방분권 명문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지난달 발표된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지방의회의 숙원과제를 대부분 누락·반영하지 못함에 대한 후속조치다.

도의회는 지난 9월 20일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한 입장 발표문에서 “2014년 발표된 계획과 비교해 자치입법권 등은 오히려 후퇴하는 등 지방분권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엿볼 수 없다”며,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한 전면수정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장선배 의장은 9월 4일과 10월 8일 시·도의회 의장들과 함께 문희상 국회의장과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만나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의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예 국회와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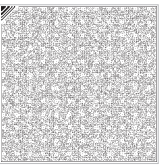
도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형식적 수준에 그친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 전면수정은 물론, 행정입법 우선개정 등 지방자치 제도개선을 공식화해 줄 것을 함께 주장했다.



충북도의원들이 10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실시된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해 지방분권 재추진과 지방의회 자율성 확대 등을 요구했다.

국회와 정부가 조속히 추진해야 할 개선사항으로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 구체적인 시행계획 마련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에 관한 조례의 조속한 법제화 △자치입법권과 관련해 조례 제정의 범위확대 조치 선행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의 양대 축인 지방의회·지방정부간 수평적 분권 확립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명확한 입장표명과 역할수행을 촉구했다.

장선배 의장은 “지방분권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지역의 공동된 요청 사항”이라며 “도의회 내부적으로는 물론 전국 광역의회간 공동연대를 통해 담보상태에 있는 지방분권형 개헌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제11대 충북도의회 3대 키워드 ‘소통 · 견제 · 개혁’

개원 100일, 도민 눈높이 맞춘 개혁과제 추진·지역현안 해결 역점

지난 7월 5일 아침차게 출발한 제11대 충북도의회가 개원 100일을 맞았다.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를 기치로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펼쳐 온 도의회가 3대 의정 키워드로 ‘소통’, ‘견제’, ‘개혁’을 꼽았다.

첫 번째 키워드 ‘소통’

소수의견이 전체를 대신했던 과거와 달리 전체의원의 의사를 존중하는 풍토를 만들겠다는 의지다. 전체의원 연찬회에서는 32명 의원 전원이 참석해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특위 구성을 가시화하는 등 내부화합을 통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특히, 전체의원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초선의원들의 열정과 패기가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각종 워크숍과 직무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의정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이는가 하면 각종 의원 연구모임을 만들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외부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민생현장 중심의 의정활동 또한 역점으로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각 상임위에서는 행정·복지 사각지대나 교육현장을 찾아 꼼꼼하게 살피고 회기·비회기 구분 없이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 지난 8월에는 극심했던 폭염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폭염피해현장과 복지시설을 오가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세 번째 키워드 ‘개혁’

그간 지탄을 받았거나 도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개혁과제로 선정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의원 해외연수는 꼼꼼한 사전준비와 심사기능 강화, 연수결과 검증 및 공개 등 개선안을 마련했다. 최근 교육위원회의 북유럽 연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일일보고로 국외연수에 새바람을 일으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숨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을 받아온 의원 징계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규칙 개정도 추진 중에 있다. △출석정지 기간에 휴회기간 제외 △윤리특위 내 외부 민간 전문위원들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10월 임시회에서 처리했다.

제11대 의회는 개원 후 정례회 1회, 임시회 3회 등 네 차례 총 47일의 회기 동안 민생관련 조례안 31건, 건의·결의안 3건 등 총 5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중 의원발의 조례는 19건으로 같은 기간 10대 의회에서 처리한 6건에 비해 세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

두 번째 핵심 키워드 ‘견제’

도의회는 제11대 의회가 초선의원이 많고 다수당이 이시종 지사와 같은 더불어민주당이기 때문에 집행부 견제가 무뎌질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였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제11대 도의회는 개원 후 네 번의 회기동안 의원들은 ‘송곳질’을 통해 집행기관을 긴장시켰다.

대집행기관 질문과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집행기관에 대하여 지역현안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는 등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소방복합치유센터’ 충북 유치 진력

이 밖에도 도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대통령 공약으로 소방청이 추진해온 ‘소방복합치유센터’ 충북 유치에 힘을 보탰다.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지원 및 KTX오송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도 10월 임시회에서 구성을 마쳤다.

도의회는 자치분권 실현과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대외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도의회 내부적으로 지방분권 촉진 결의대회를 가진데 이어 전국 광역의회 지방분권 촉구대회에도 동참했다.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지방의회의 숙원 과제를 반영하지 못한 데 대한 후속활동이다.



도의회, 국제 우호교류활동 통해 동반성장 도모

베트남 빈푹성 · 중국 광시좡족자치구와 활성화 방안 모색

베트남 빈푹성과 충북기업 지원 및 교류확대 등 논의



충청북도의회 대표단 일행이 10월 2일 베트남 빈푹성인민위원회를 방문해 응우옌 응옥빙 부의장 및 위원들과 공식 회담을 가졌다.

도의회는 10월 2일부터 10월 5일까지 4일간 심기보 부의장을 단장으로 이상식 · 박형용 · 송미애 · 이옥규 · 임영은 의원을 대표단으로 구성해 베트남 빈푹성인민위원회를 공식 방문했다.

빈푹성 인민위원회의 초청으로 성사된 이번 방문에서 도의회 대표단 일행은 빈푹성 인민위원회 응우옌 응옥빙 부의장 등과 회담을 통해 그동안 교류 성과와 양 지역의 교류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회담에서는 양 도·성의회의 운영 노하우 공유, 투자 유치와 무역 · 관광, 공무원 파견 확대, 충북기업의 빈푹성 투자유치 지원, 의회사무처와 국제교류 담당부서 간 연간협력계획 수립 등을 주요의제로 협의했다.

대표단은 또, 빈옌시의회 인민위원회와의 회담을 갖고 충북기업 투자유치 등을 논의하고, 충북향우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가졌다.

심기보 부의장은 “도의회와 빈푹성간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양 지역 국제교류가 실질적인 차원에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2012년 11월 빈푹성 인민 위원회와 우호교류 체결 후 상호 방문하는 등 우호증진에 애써 왔다.

중국 광시좡족자치구와 실리적 경제교류 활동 추진



충청북도의회 대표단이 11월 1일 중국 광시좡족자치구 인민대표대회를 방문해 왕유페이 부주임 및 상무위원들과 공식 회담을 가졌다.

도의회는 10월 30일부터 11월 4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장선배 의장을 단장으로 이상욱 · 정상교 · 이상정 · 김기창 · 연종석 의원을 대표단으로 구성해 중국 광시좡족자치구 인민대표회의를 공식 방문해 양 도·성 지역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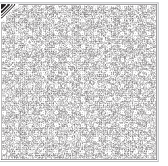
사회 · 경제 · 문화예술 등의 교류확대 방안을 협의했다.

중국 광시좡족자치구 인대의 초청으로 이뤄진 이번 방문에서 대표단은 난닝시를 방문해 인대 상무위원회와 좌담회를 갖고 그간의 교류 성과를 점검한 후 양 지역의 교류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대표단 일행은 경제교류를 통한 양 지역이 실리 확대, 2019무예마스터십 선수단 및 대표단 파견, 청주공항~계림공항 직항로 개설 등을 제의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장선배 의장은 “충북도의회와 광시좡족자치구 인민대표회의가 공동번영을 위한 교류 증진방안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양 지역 간 국제교류가 실리적인 경제교류로 확대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충북도의회는 2009년 10월 광시좡족자치구 인대와 우호교류 협정 체결 후 상호 방문을 하는 등 신뢰와 우의를 쌓아왔다.



교육위원회 국외연수, 민박·대중교통 이용 ‘모범사례’로 꼽혀

8박 10일 일정으로 덴마크·독일의 선진교육 벤치마킹 실시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행복교육이 정착된 덴마크와 민주시민교육 선진국인 독일을 방문해 교육현장을 견학하고 교육정책·활동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했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숙애)는 충북도교육청의 주요 시책인 ‘행복씨앗학교와 민주시민교육’의 선진국인 덴마크의 ‘행복교육, 독일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지원과 견제 등의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숙애 위원장을 단장으로 서동학·김영주·이의영·황규철 의원과 전문위원실 직원 등 총 8명을 연수단으로 구성하여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8박 10일 일정으로 국외연수를 진행했다.

교육위원회가 처음 방문한 곳은 행복교육의 선진국 덴마크로, 이곳에서 3박 4일간 교육부를 방문하여 관계관으로부터 교육현황에 대한 기본설명과 질문·답변을 통해 덴마크의 공교육과 자유학교(대안학교)에 대한 연수를 진행했다.

또한 놀이를 통해 협력과 소통을 추구하는 헬러롭 스콜레, 체험형 과학관인 엑스페리엔타리움의 시설 견학, 소통의 교육공간을 잘 갖추고 있는 외레스타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를 방문했다. 또 크로컬업 폴케호이스콜레를 방문하여 한국교원대학교 휴학생과 현직 초등학교 사로서 휴직 중 이곳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과 함께 수업도 같이 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 연수국인 시민교육의 선진국인 독일에서의 4박 6일은 독일통일의 상징인 베를린 장벽 및 통일기념시설 방문을 시작으로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정치 교육원, 베를린 연방정치교육원과 프레드리히 에버트 재단을

방문하여 독일의 시민교육 및 정치교육, 학생들을 위한 통일교육 등에 관하여 관계자들의 현황 설명을 듣고 질문·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외에도 세계 최초의 민주헌법인 바이마르헌법을 제정한 역사적인 현장과 유네스코에 등재된 크리스티어 위블이겐 수도원의 도서관, 밤베르크 성당, 궁정, 노이반 슈타인 성 등 독일의 문화를 탐방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번 국외연수 기간 동안 대표단 일행은 행복교육이 정착된 덴마크와 민주시민교육의 선진국가인 독일을 방문하여 관련기관, 학교 교육현장 등을 참관하면서 선진국의 교육정책과 교육활동에 대한 교육적 견문을 넓히는 등 활발한 국외연수 활동을 펼쳤다.

특히 이번 방문단은 버스, 열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자동차를 렌트하여 운전하면서 독일 전역을 다녔다.

또한 호텔과 민박을 이용하며 매일 밤 숙소에서 그날의 소감을 나누고 연대감을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위원회는 오는 11월 23일 도민과 교육관계자, 언론인 등을 초청하여 이번 국외연수의 결과 보고회를 갖고, 현지에서 보고, 듣고, 배운 것들을 충청북도 교육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교육위원회는 국외연수기간 중인 10월 1일에 독일 연방정치교육원을 방문하여 독일의 ‘시민교육’ 등에 관련한 사항들을 청취했다.

의회운영위원회

제367회 정례회
제368회 임시회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및 규칙 등 의결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영주)는 제367회 정례회 회기 중 위원회를 열고 의회사무처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5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932만원이 증액된 102억8340만원으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여성의원 휴게실 설치·운영비 1380만원,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확대(6회→8회) 752만원, 기타 의회운영 지원 1800만원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어 진행된 의회사무처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에서는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세입은 징수결정액 1284만8000원이 전액 수납됐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104억6169만7000원 중 96억6338만원을 지출하고 950만원은 이월했으며, 집행잔액 7억8881만7000원이 발생했다.

위원회는 또,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충청북도의회 공무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각각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했다.

그리고, 제368회 임시회 회기 중에는 두 차례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과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을 심사·의결했다.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1월 9일 의회사무처장과 총무담당관·의사담당관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여 2018년도 주요시책 및 업무 추진상황, 예산집행 현황 등 기관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감사하기로 의결했다.

이어, 윤리특별위원회 심사의 전문성·투명성 강화와 징계양형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마련을 주요골자로 하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해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했다.

또한,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지원 및 KTX오송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 가결하고, 제369회 정례회를 오는 11월 8일부터 12월 21일까지 44일간 열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로 협의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10월 24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지원 및 KTX오송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정책복지위원회

제367회 정례회
제368회 임시회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충북도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제정



위원장
박상돈 의원



부위원장
박형용 의원



심기보 의원



육미선 의원



이상옥 의원



최경천 의원



정책복지위원회는 10월 12일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을 방문해 현황을 보고 받고 시설을 점검한 후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박상돈)는 제367회 정례회 기간 중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박형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차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을 심사·의결했다.

「2017년도 결산 및 예산안」 심사에서 박상돈 위원장은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과 함께 불합리한 임금제도 개선요구를 촉구하고, 박형용 의원은 농촌지역에 대한 청소년 방과 후 활동지원 수혜자 확대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심기보 의원은 행정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경상적 경비가 추경예산을 통해 요구 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하고, 육미선 의원은 청소년육성기금 조성액 규모 확대와 내실 있는 성인지 예·결산 수립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이상옥 의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물품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하고, 최경천 의원은 성평등 교육 남성참여율 확대와 미세플라스틱 먼지 문제에 대한 도 차원의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제368회 임시회 중에는 위원회를 열어 「충청북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과 「2019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 「2019년도 기획관리실 출연계획안」 등과 기타 안건들을 심사·의결했다.

먼저 육미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북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 심사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 시책 수립,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수립에 필요한 자료·정보 수집 및 정기 실태조사 실시,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등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2019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려는 충북여성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 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한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이어, 실시한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했다.

위원회는 또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등을 방문하여 간담회를 갖고 주요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행정문화위원회

제367회 정례회
제368회 임시회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문화활동 개선 위한 충북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등 의결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전원표)는 제367회 정례회 기간 중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먼저, 연철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허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어 실시한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철저한 사후 평가와 이를 토대로 한 지원여부 결정 등을 주문하고, 한국전쟁 미 발굴 민간인 희생자 추가 유해 발굴 등을 요구했다.

또, 문화체육관광국 심사에서 의림지 역사박물관 건립과 같은 대규모 사업비가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 지속적인 중간성과 모니터링 등을 요구했다.

결산안 심사에서는 결손처분이 발생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이를 줄일 수 있도록 세입예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도정홍보와 관련해 광고매체 선정 등 홍보방법을 점검하고, 인터넷 콘텐츠를 활용한 효과적인 홍보를 주문했다.

제368회 임시회 중에는 「충청북도 인터넷방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19년도 충북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충청북도 인터넷방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서는 도민들이 인터넷방송 사용에 불편함이 없는지 확인할 것과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하고, 인터넷방송 운영 성과보고서에 전문가 의견이 누락된 점을 지적하며, 전문가의 검토와 보완을 촉구했다.

이어,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에서는 청주의료원 현장점검에서 확인된 증축 방안보다 더욱 효율적으로 증축되도록 재검토 해달라고 촉구하고, 「2019년 충북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심사에서는 '18년도 평가에서 B등급으로 하향된 이유를 지적하며 차질 없는 운영을 당부했다.

또, 「2019년 충북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심사에서는 인상되는 주요 인건비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 등을 주문하며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당부하고, 창의적 문화 활동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도민들의 문화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해 달라고 촉구했다.



위원장
전원표 의원



부위원장
허창원 의원



송미애 의원



연철흙 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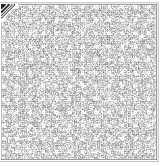
이옥규 의원



정상교 의원



행정문화위원회는 10월 12일 청주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 현장을 찾아 문화재 발굴 조사를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산업경제위원회

제367회 정례회
제368회 임시회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농업소득·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직무연찬 등 실시



위원장
박우양 의원



부위원장
임영은 의원



박문희 의원



이상식 의원



이상정 의원



하유정 의원



산업경제위원회는 9월 17일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을 방문해 현황을 듣고 시설을 점검한 후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당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박우양)는 제367회 정례회 기간 중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안건을 심사·의결 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산경위는 9월 5일과 6일 제1·2차 위원회를 열어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하고, 9월 7일 실시한 제3차 위원회에서는 조례안과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의결했다.

또, 중소기업의 대외경쟁력 및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박문희 의원과 이상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중소기업 수출촉진 지원 조례안」과 「충청북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조례안」을 각각 원안 가결했다.

이어, 임영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는 농어촌개발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해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위원회는 또한 9월 17일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등 4곳의 출자출연기관을 방문하여 기관별 사업추진 현황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제368회 임시회 기간 중에는 각종 안건 심사와 금융감독원 충북지원 등 3개 기관·단체와의 현안 간담회를 갖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10월 12일 실시한 제1차 위원회에서는 이상정·하유정·이상식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의 조례안과 「2019년도 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 계획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심사·의결하고, 10월 24일 제2차 회의를 열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증인·참고인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등을 심사·의결 했다.

위원회는 또 10월 12일 보은에서 개최된 대추축제 개막식에 참석한 후 대추연구소 홍보부스를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10월 15일 보은여자고등학교를 방문해 하유정 의원이 「찾아가는 의회교실」을 진행했다.

이어,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제주도 일원에서 자체 연찬회를 추진하며 제주 축산 진흥원, 동문 전통시장, 신재생에너지홍보관 등을 방문하여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등 알찬 시간을 가졌다.

또, 10월 24일 금융감독원 충북지원, 청주생활용품 유통사업협동조합 등과 현안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제367회 정례회
제368회 임시회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지역균형발전 사업 및 소방안전시설 등 점검

건설환경소방위원회(위원장 이수완)는 제367회 정례회 기간 중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의결했다.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공익사업 부지로 보상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 방안을 주문하고, 진천 종합안전교육체험관과 관련하여 더 많은 어린이 안전체험관 조성 및 홍보를 당부했다.

이어, 공공기관 이전 지원에 따른 이주율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을 주문하고, 호우피해 원인분석 및 저감대책 수립용역에 대해 작년에 피해 입은 상황인데 올해 말에 용역을 추진하는 것은 잘못 됐다고 강조하며, 지금이라도 동일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중장기적 재해대책 방향과 목표를 면밀히 설정하여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또, 「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는 병역명문가 우대에 관한 사항이 타 조례에 명시된 우대내용과 상이하여 이를 일원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했다.

제368회 임시회 기간 중에는 「2019년 본예산 편성관련 주요사업 보고」를 받고,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의결했다.

이번 주요사업 보고는 내년도 본예산 실국별 핵심 주요사업과 신규 사업에 대해 계획단계부터 도민의 의견이 수렴된 예산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운용의 건전성 확보 등 재정혁신을 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수완 위원장은 “집행부가 예산편성 전에 의회에 주요 편성 사업을 설명하는 것은 도에서 추진계획 중인 핵심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내용을 인지하고 소통하는 기회 자체가 의미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위원회는 18일과 19일 경북소방본부 청사를 방문하여 경북소방본부 및 119종합상황실 현황을 살피고, 단양군에 위치한 지역균형발전사업 I단계인 다누리센터, II단계인 만천하 스카이워크, 단양소방서 등을 방문해 현황을 점검했다.

위원회는 또 10월 24일에는 제2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건의안」을 심사해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했다.



위원장
이수완 의원



부위원장
윤남진 의원



김기창 의원



박병진 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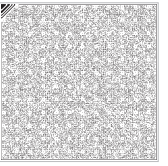
연종석 의원



오영탁 의원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10월 18일 직무연찬회 기간 중 경북소방본부 청사를 방문하여 119종합상황실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교육위원회

제367회 정례회
제368회 임시회

도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스쿨 미투 및 성폭력 점검·예방 개선대책 마련 촉구



위원장
이숙애 의원



부위원장
서동학 의원



김영주 의원



박성원 의원



이의영 의원



임기중 의원



황규철 의원



교육위원회는 10월 11일 제천교육지원청 리모델링 사업과 소규모 학교와 관련하여 충주 가흥초등학교와 산척중학교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숙애)는 제367회 정례회 기간 중 위원회를 개최해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청 추경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9월 6일 실시한 제1차 위원회에서는 「2017 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 지출 승인의 건」 등을 원안 가결했다.

9월 7일 실시한 제2차 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 충청북도교육감이 기정예산 대비 1747억4337만1000원(6.6%) 증액된 2조8112억7866만6000원을 계상하여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총 9666만1000원을 삭감해 의결했다.

9월 17일 실시한 제3차 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특수교육원의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활동 홍보강화, 북페스티벌 사업 공간 확대, 국제교육원 다문화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방안 검토, 학생교육문화원의 문화·예술기획공연 남부3권·북부3권 제공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그리고, 제368회 임시회 기간 중에는 2차례 위원회를 열어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 등 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충청북도 교육감이 제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10월 15일 제1차 위원회에서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과 이숙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했다.

또, 서동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사립 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수수료 징수 조례안」과 김영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통일교육 진흥 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어, 이의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교원단체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황규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68회 임시회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및 2017회계연도 결산 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연중석)는 제367회 정례회 회기 중 세 차례 위원회를 열고, 충청북도지사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결산 승인의 건」 등 6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했다.

9월 10일 제1차 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충청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선 7기 공약사업과 재해·재난 사전 예방사업을 우선 반영한 것으로,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2037억이 증액된 4조5130억원으로 일반회계가 4.4% 증액된 4조4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7.2% 증액된 5082억원이다

기획관리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실시된 심사는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오후 7시를 넘겨서야 마무리 되었으며, 계수조정 결과 일반회계는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 등 8건에 3억 7025만원을, 특별회계는 오토바이 및 진압장비 구입비 2건에 1968만원을 각각 삭감했다.

위원회를 개최하여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7회계연도 충청북

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각각 심사하여 원안대로 승인했다.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안 규모는 세입결산액 4조6825억원, 세출결산액 4조2993억원으로, 3832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했는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이월액 1375억원, 보조금 잔액 11억원, 순세계잉여금 2445억원 등이다.

또,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는 세입·세출 결산안 규모는 세입결산액 2조7713억원, 세출결산액 2조4899억원으로, 2814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는데, 세계잉여금은 이월액 1847억원, 보조금 잔액 20억원, 순세계잉여금 946억원 등이다.

9월 12일 오후에는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2조6365억원 대비 1747억원(6.6%)이 증액된 2조 8112억원이 계상됐다.

계수조정 결과 영동기숙형중학교 씨름장 신축(가칭) 등 총 3개 사업 9666만1000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기로 수정 가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0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의결했다.



박문희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교육 주체인 도교육청 무상급식 부담액 턱없이 적은 이유가 무엇인가”

[질문] 교육이 주체인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부담액이 적은 이유와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답변] 우리 도의 재정만 허락한다면 100% 도에서 부담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지만 교육이라는 별도 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100% 부담하는 것은 교육 자치단체가 별도 있는 입장에서 다소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상급식에 우리 도 예산 연 400억 정도, 교육재정교부금 약 매년 2000억 정도가 교육청 예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합하면 2400억 정도인데, 많으면 좋지만 많이 갈수록 도에서 관리하는 농민, 노동자, 장애인 또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갈 예산이 그쪽으로 간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교육청과 원만히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 무상급식 부담률이 올해 말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는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협의를 관리 조례안에 담아서 명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답변] 안정적 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할 수가 있겠지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매년 재정여건 등 여러 가지를 종합 고려해서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는 것보다는 양 기관 간의 협의 그리고 의회의 조정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친환경 식자재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학생들의 건강, 그리고 도내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해 많이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친환경 식자재 사용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상급식과 별도로 친환경 식자재 공급을 시군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군의 자율성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질문] 친환경 식자재 사용과 관련하여 지자체의 주도적인 노력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교육청의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답변] 지역단위 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수급을 조정하는 것으로 풀면 어떨까 하는데, 기초지자체 단위로 만들 것이 아니라 광역 권역별로 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 권역별로 한 두세 개 지자체씩 모여서 급식지원센터를 하면 조금 더 보완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 현재 도내에는 네 곳의 대안학교가 있는데 이중 다다 예술학교가 가장 어렵고 힘든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만약에 예산을 배정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교육감의 재량으로 예산을 좀 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답변]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안타까워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우리 의원님께서 또 그 부분을 많이 안타까워해 주시고 그래서 이후에 관련된 법적 근거를 좀 같이 만들면 저희가 큰 부담 없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교육감님께서 조례 개정하는데 도와주실 거요?

[답변] 조례를 개정하는 것 자체가 형식적인 절차가 어려운 것은 아니므로 지혜를 모아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질문] 대한민국 교육정책이 수시를 확대하고 정시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평준화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들었는데 맞는건가요?

[답변] 수시비율이 확대되어 온 것은 지금까지 근래 몇 년에 전체적인 추세였구요, 분명한 것은 수시 중심의 그리고 학생종합생활기록부 위주의 전형방법이 지방학생들에게 유리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재수생보다 현역 졸업 예정자들에게 유리한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우리 지방학생들에게 정시중심 또는 수능중심의 대입전형 준비를 시키는 것이 상당히 불리합니다.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제367회 정례회 주요처리의안

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이수완 의원)

- 병역명문가 우대에 관한 사항이 타 조례에 명시된 우대내용과 상이하여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일원화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

충청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연철흠 의원)

- 인권보호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인권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여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임영은 의원)

- 농·수산물의 유통안정과 농어촌소득개발을 위하여 설치·운용중인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신설함으로써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용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박형용 의원)

-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과 관련해 지원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부적당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및 문구 등을 개정하는 등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허창원 의원)

-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 및 보고 절차를 규정하여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의회의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위탁사무 기간 만료 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재계약 및 재 위탁에 반영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제출 : 충청북도교육감)

- 2017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 집행결과인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에 대한 승인과 기금·채권·채무·공유재산·물품 결산 및 지역 통합재정통계보고서에 대한 승인을 받고자 함

충청북도 중소기업 수출촉진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박문희 의원)

-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촉진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출중소기업의 체계적 육성과 대외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충청북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조례안

(대표발의 : 이상식 의원)

-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충청북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제출 : 충청북도지사)

-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 : 충청북도지사)

- 충주 에코폴리스지구 개발사업 중단에 따른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충주지청 조직 축소 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

제368회 임시회 주요처리안

충청북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오영탁 의원)

- 유아의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추구하기 위한 유아 숲 교육의 체계적인 추진과 숲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충청북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

(대표발의 : 이숙애 의원)

-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이 보호될 수 있는 학교운동부 운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이숙애 의원)

- 제22조, 제24조, 제25조의 품질성능평가시험 방법과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방식, 서류제출 사항을 실효성 있게 개선·보완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하유정 의원)

-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되어 운용중인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복지관 설치가 어려울 경우 민간 건물을 입차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충청북도 사립 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수수료 징수 조례안

(대표발의 : 서동학 의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선발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응시자에 대한 전형료의 징수 규정은 있으나, 초등학교 및 유치원의 입학선발수수료의 징수 규정이 없어 근거를 마련

충청북도교육청 통일교육 진흥 조례안

(대표발의 : 김영주 의원)

- 충청북도 내 각급 학교에서의 통일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평화통일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학생들의 올바른 인식 함양 및 통일준비역량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 : 충청북도지사)

- 다수인 출입이 많은 다중이용업소를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하여 비상구 안전관리 향상으로 화재안전기반 조성, 포상금 지급을 현금으로 개정하여 도민 신고의식 제고

충청북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

(대표발의 : 육미선 의원)

- 충북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을 도모

충청북도교육청 교원단체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이의영 의원)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단체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교직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육 여건 조성에 기여

충청북도 생산직 일손봉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이상정 의원)

- 생산직 일손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력을 확대하고 유공자 포상 등의 규정을 마련함은 물론 추진된 사업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사업의 적정추진 및 확산을 도모

충청북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오영탁 의원)

- 상위법령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장에 따른 저탄소 사회를 구현하여 도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과 충청북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충청북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오영탁 의원)

- 충북도민들의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 습득과 가치관을 형성해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황규철 의원)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함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 : 충청북도지사)

- 「국가균형발전특별법」(18.2.28.)과 「지방재정법」이 개정(법률 제12687호, 2014.11.29.시행) 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조례 용어 현행화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반영



청년실업 문제 해결 등 현안 해결에 충북도가 앞장서자



박 우 양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최근 신문 기사와 방송 보도를 보면,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난, 고용쇼크, 소상공인·자영업자 줄도산,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수지 악화’ 등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매우 위험한 지경에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중 가장 심각한 것이 일자리 정책이고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은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 모두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정부나 각 지자체별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청년 일

자리를 창출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한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고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기불황이 장기화되고 최저임금 인상, 식재료 가격 인상 등으로 지역경제 허리역할을 담당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수익이 대폭 감소하면서 도산하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소상공인·자영업의 경영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차등 적용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카드 수수료의 인하, 세제혜택 등 우대정책, 다양한 정책자금 지원 등의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충청북도의 폭염과 가뭄 대책 마련을 위한 제언



하 유 정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올 여름은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이상기후가 발생하여 폭염일수가 32.3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극심한 폭염과 가뭄으로 농작물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 가뭄과 폭염의 해결 방안의 하나로 집행되었던 사업 중에서 관정개발이나 저수지 준설 사업들은 시간을 요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대형관정의 경우 농작물 수확이 끝난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선제적 대응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사업의 효과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친환경축산시설장비 보급사업’으로 한우농가에 꼭 필요한 환기팬 등을 지원하고 ‘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사업’으로 돼지, 닭 사육농가에 축사 온도조절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 당초예산 편성시 예산이 올해보다 더 증액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반영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재해는 예측이 어렵고 농민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은 필수사항이니, 농작물재해보험과 가축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는데 충청북도 차원의 획기적인 홍보와 특단의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개선하라



임 영 은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관심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회복지사의 문제점과 향후 처우개선을 통해 사기진작에 노력할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간 사회복지 분야는 정부와 사회로부터 꾸준한 관심을 받고 예산도 증가하였으나 정작 사회복지사를 책임지는 종사자들에게는 업무와 책임성만 가중될 뿐 처우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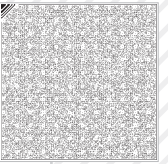
그래서 본 의원은 충청북도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일환으로 지급하고 있는 ‘충북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우수당’ 지침을 대대적으로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행복한 복지 충북’으로 가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를 대신하여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들에게 「희생과 헌신」 만을 강요하기 보다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사업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벼랑 끝에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처우개선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지역 갈등 조장하는 자치연수원 이전 계획 백지화를



박 병 진 의원
(간설환경소방위원회)

북부권 균형발전이라는 가당치 않은 명분으로 추진 중인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이전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도민 여러분들께 밝히고, 명분없는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이전 사업의 철회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도시와 농촌이 하나된 균형발전 정책을 표방하는 이시종 지사님은 민선7기 공약을 통해 기대효과와 명분이 없는 자치연수원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치연수원이 위치한 가덕 주민들은 벌써부터 주변 상권 붕괴를 의식해 들썩이고 있으며, 특히 북부권 이전 추진으로 인하여 제천시까지 교육을 받으러 가야하는 남부권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상실감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발표한 공약이라고는 하지만 균형발전 정책과 지역의 민심을 고려하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공약이 왜 추진되어야 하는지 여이가 없을 뿐입니다.

충청북도 자치연수원이 현재 위치한 청주시 가덕면은 단재연수원, 교통연수원, 농업연수원이 집약되어 있는 곳으로, 제천시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과 도민들의 편익을 증진 제공하는 충분한 공감대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도민들의 진정한 행복 위한 충북형 생활임금제 도입 촉구



최 경 천 의원
(정책복지위원회)

생활임금은 노동자에게 실질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게 하는 기초적인 적정소득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최저임금보다 높게 결정되는 민생대안 정책의 하나입니다.

생활임금제도는 2013년 서울시 노원구와 성북구에서 최초 도입되었고, 이후 12개 광역시·도 및 88개 시·군에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충북 노동자의 월 평균 근로시간은 185.6시간으로

전국 광역시·도 중 가장 길고, 임금 수준은 12위에 그쳐, 장시간 근로, 저임금지역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충북형 생활임금제 도입 및 관련 조례 제정을 미루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도민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생활임금이 보장되는 좋은 일자리로 바뀌어 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생활임금제 도입은 사회 양극화 해소는 물론, 노동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입니다.

충북형 생활임금제 도입과 조례 제정이 민선 7기에 반드시 실시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요청 드립니다.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제천 이전 다시 생각해 봐야...



허 창 원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지사님의 공약사업 중 우려스러운 한 가지 사업이 있어 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북부권 균형발전을 위해 청주에 위치해 있는 충청북도자치연수원을 제천으로 이전하신다는 공약사항을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실 것들의 바랍니다.

첫째, 과연 자치연수원의 제천시 이전이 북부권의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현재 제천시에는 많은 중앙부처의 연수원이 이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제천시의 경제에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둘째, 자치연수원 교육생들에게 지급하는 교육비 증가로 인한 자치단체의 부담 증가입니다.

제천시로 이전할 경우 연간 4억정도가 증가합니다. 셋째, 자치연수원 이전 시 연수원의 부지비용을 제외하고도 건축비만도 약 600억여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부권은 제천, 단양을 아우르는 관광지역입니다. 지역의 경쟁력 있는 특성을 살려 관광단지조성 등 관광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기후환경 변화에 대비한 재난관리정책 전환 촉구



윤 남 진 의원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최근의 이상 기후환경 변화에 따라 충북지역 곳곳이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어 도민보호를 위한 재난관리정책의 전환을 촉구하며,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천, 도로 등 공공시설의 피해 복구에 대해서는 복구비를 신속히 확보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하며, 특히 주택, 농경지, 농작물 등 사유시설 피해에 대해서는 추석 전 재난지원금을 조기 지원하여 피해 주민들이 조

기에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하천 복구시 충분한 단면 확보 및 자연 유로를 최대한 반영하여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도로는 사면의 안정성을 충분히 확보하여 안정적인 도로 건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현재 기능복원을 중심으로 한 응급복구도 중요하지만 피해발생 원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거나 피해시설 기능을 개선하여 항구적인 시설 복구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물 복구에 초점이 맞추어진 현재의 복구방식에서 벗어나 재난피해를 입은 지역 사회를 복원한다는 공간적 개념으로 접근하여 '복구'가 아닌 '복원'의 개념으로 재난관리 정책의 전환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충북혁신도시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철저히 대비하자



이 수 완 의원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충북혁신도시의 2차 도약’과 ‘혁신도시 시즌2’를 실현하기 위해 충북도의 대응과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대응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금년 2월 2일 ‘혁신도시 시즌2’를 발표하였습니다. ‘혁신도시 시즌2’는 2030년까지 이미 조성된 혁신도시의 지원에 관한 로드맵을 정하고, 금년 10월까지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혁신도시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신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입니다.

충북도는 122개 공공기관에 대한 추가이전 움직임을 예의주시하여 철저히 분석하고, 국토교통부의 공식적인 입장발표가 있기 전에 전략적인 대비를 해야 합니다.

이미 이전을 완료한 기관과의 연계성과 특성을 고려한 치밀한 사전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혁신도시 시즌2’의 완벽한 구현을 위해 추가 공공기관 이전 및 발전 계획을 병행 추진하여 도시의 활력을 배가시키고 국가균형발전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전략적 대응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국가균형발전은 물론 충북혁신도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충북도,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체계 활성화 시급



육 미 선 의원
(정책복지위원회)

충북대병원, 청주·충주의료원, 시·군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공공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도민 건강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한 의료서비스의 공백과 지역 간 의료격차가 현저한 실정입니다.

특히 충북은 타 시·도에 비해 일찍 고령사회에 들어서기 때문에 노인 인구와 기대수명만큼 치매 및 노인성 질환의 예방·치료에 대한 대책마련도 시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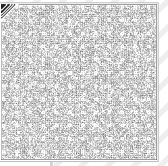
따라서, 도민이 공평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체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도 차원의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지역 공공보건의료 중장기 마스터플랜의 수립이 필요합니다.

둘째, 충북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싱크탱크 역할과 총괄적 관리·조정하는 컨트롤 타워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를 지원해야 합니다.

셋째, 현재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지역 의료체계를 개선하고 공공보건의료 활성화를 유인할 민·관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 충북의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변화하는 환경을 충북발전의 기회로 삼자



연철흠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저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방분권 확대와 남북관계 개선 등 우리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충청북도가 시대의 변화에 맞게 미래를 준비하자는 주장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내 균형발전을 위하여 교통 등 입지조건이 양호한 오송역 인근과 그 밖에 도내에 공공기관을 유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오송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6개의 공공기관

이 입주해 있지만, 더 많은 공공기관이 이전을 해서 관련기업과 대학과 연구소 및 중소기업까지 들어선다면 오송역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남북협력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분야부터 남북교류를 하는 방안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단재 신채호선생이나 벽초 홍명희선생, 정지용선생 등 충북 문학인들에 대한 남북 공동연구나 학술대회를 통해 정서적 동질성이 있거나 실현가능성이 높은 사업부터 촘촘히 준비하고 발굴하여 남북교류를 추진하였으면 합니다.

하루하루가 변화하는 환경이 충청북도에게는 발전에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충북 100년 미래, 지역균형발전 전략으로 설계하자



박성원 의원
(교육위원회)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 이 슬로건은 지방자치와 분권을 강화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추구하고자 하는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입니다.

그러나 충북은 도청 전체 직속기관 중 소방서와 출장소를 제외한 거의 모든 기관과, 충북개발공사 등 출연·유관기관이 모두 청주지역에 있고, 충청북도교육청도 12개 직속기관 중 해양수련원 등을 제외한 9개 기관의 본원이 청주에 몰려 있습니다.

이는, 지역발전은 안중에도 없는 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반면, 2011년 시작된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공사는 제천~충주구간인 4구간이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교통망이 어렵고 낙후된 4구간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먼저 시행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지역발전에 대한 해안은 그 지역주민에게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하게 할 때 시민들의 자주적 역동성은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충북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대의명분에 함께 해주십시오.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충북, 강한 충북’을 위해 공공기관의 지역이전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공약 남발의 피해는 도민들의 몫인가?



연종석 의원
(건설환경소방위원회)

2017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인구유치에 크게 못 미치는 심각한 상황인데 반해 증평군의 합계출산율은 전국 합계출산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시종 지사님은 ‘증평 공공산후조리원이 작은 병원 개념’이라고 평가절하하며, ‘청주와 지근거리에 있는데다 산후조리원이나 소규모 산부인과로 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결론을 내려 공약을 폐기했습니다.

세대변화와 함께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지만, 군단위 지역은 시설이 한 곳도 없는 곳이 허다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아 일반인들이 이용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금년 5월을 기준으로 전국 7곳에 운영되고 있으며 민간 산후조리원 대비 반값 정도로 이용 가능하고 위생관리를 통한 감염예방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공약남발에 따른 피해를 도민들에게 고스란히 떠넘기고 빈 공약으로 표만 얻어가는 지사님의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며, 공공산후조리원이 없어 비용이 만만치 않아 입실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던 수많은 산모와 아기들을 생각하며 공약 추진을 재검토해 주시기를 촉구 드립니다.



안전한 먹거리 해결 위해 광역공공급식센터 설치하자



이 상 정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현재 쌀을 제외하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학교급식에 거의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충청북도 학교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학교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사용할 것을 명시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충청남도과 경기도는 우리보다 늦게 무상급식을 실시했지만, 지역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비율은 훨씬 높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입니다.

충남의 경우, 15개 시·군 중 이미 13개 시·군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미설치 시·군도 곧 설치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을 통해 학교급식에 지역농산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곧 광역공공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주민들의 안전한 먹거리에 관심이 없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충청북도과 교육청이 학생들과 도민들의 먹거리 문제, 건강권에 적극 나서 주시기를 요구하며, 이를 위해 ‘충청북도 광역공공급식센터’ 설치와 추진단 구성을 제안하며, 이를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지방소멸’ 막을 인구감소 대책마련 촉구



오 영 탁 의원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통계청의 인구추계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전체 인구는 2031년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추세를 따라갈 경우 인구의 자연증가에 의한 정점이 2028년이 아닌 2021년까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16년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 보고서가 발표되자 전라북도과는 행정부지사 총괄 아래 도 관련부서 뿐만 아니라 농촌 교령·과소화 마을 대응 TF를

구성해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문제해결에 적극 나섰고, 경상북도 또한 인구조정 컨트롤타워구축, 저출산 극복 선도모델 발굴, 저출산 대책 평가 환류시스템을 구축하여 발 빠르고 시의적절한 대응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도 지난해 수행한 대응전략과제와 쇠퇴지역 활성화방안 과제에서 제시한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 부서가 과소화 대응 지표를 발굴하고 지표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통합적 접근과 농촌청년일자리, 복지·교육·의료 분야에 집중적인 지표개발과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초저출산·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대응전략을 수립해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대농지구 학교과밀 해결 위해 학교시설복합화 추진하자



이 상 식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학교는 교수·학습을 위한 본질적 기능수행을 위한 공간입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공동체의 공간이며, 평생교육현장으로서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학교가 전통적인 기능뿐 아니라 시대의 요구에 맞는 복합적 기능까지 포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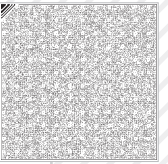
학교시설복합화는 학교 신축 시 주민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에게는 질 높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주민에게는 삶

의 질 향상 및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적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현재 시행중인 학교시설 개방과는 엄격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학교시설 복합화는 학생과 주민의 공동이용이라는 점과 투자 주체가 교육청과 지자체 공동이라는 점이 크게 다릅니다.

학교시설복합화에 대해 충청북도교육청과 청주시의 협의 과정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청주시도 장기 미개발토지의 조속한 활용을 위해 도교육청과 적극적인 협의를 이뤄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접근하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주체는 도교육청이므로 교육감님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 배출 관련 철저한 지도·감독 필요



이 상 옥 의원
(정책복지위원회)

다이옥신의 위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다이옥신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이 다이옥신 분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을 요청합니다.

다이옥신은 맹독성 1급 발암물질로 사람과 동식물 체내에 축적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다이옥신에 대한 관리감독은 배출시

설의 허가·지도 및 감시·감독 업무 상당부분이 지방환경관서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현재 충북의 배출시설 관리는 금강유역환경청과 원주지방환경청에서 담당하는데, 적은 인원으로 충북의 69개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국내 다이옥신 문제는 1999년 벨기에산 육류에서 허용기준치의 140배에 달하는 다이옥신 검출로부터 사회적 문제로 촉발돼 이후, 생필품을 비롯한 하천 및 토양에서도 검출돼 심각한 사회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충북에서도 지난해, 모 폐기물 소각업체가 허용기준치의 5배 이상을 배출해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다이옥신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의 분석기관 지정은 꼭 필요합니다.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위한 충북 관광산업의 미래 혁신동력 제안



송 미 애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충북은 바이오와 태양광산업에 초점을 맞추고 투자와 지원을 펴하고 있으나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관광산업에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투자로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게 그것입니다.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제조업은 2.8% 성장한 반면, 같은 기간 관광업은 무려 6.0%가 성장하였습니다.

이것은 제조업의 성장률 정체와 사회전반의 고용둔화를 맞은 우리 사회가 관광산업을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

장동력으로 삼아야 하는 충분한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충북은 관광산업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가 미흡합니다. 관광의 열악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대안과 대책을 생산해 내야 할 책임주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충북의 관광정책 수립과 개발, 정부 및 시·군과의 협력 등을 이루어내기 위한 전담기구가 필요합니다.

충북개발공사 내에 관광정책 수립과 개발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사의 설립취지와 업무내용, 그리고 행·재정적 안정성을 토대로 충북의 관광개발에도 적극 나설 수 있어야 합니다.

조직의 활용은 시기와 목적에 맞게 변경되고 추가될 수 있어야 합니다.

KTX세종역 신설 논란 도민 공감대 적극 대처 필요



이 옥 규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KTX세종역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신설이 불가하다는 결론이 나왔는데도 이해찬 대표가 KTX세종역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163만 충북도민을 무시하고 충청권 지자체간 갈등을 유발시키는 망동으로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세종역 신설 문제는 세종시 건설의 목적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춘희 세종시장님이 초대 행복도시 건설청장 재직시 검토했지만 타당성이 없어 세종역 신설을 하지 않

았을 뿐 아니라 오송역이 관문역으로 고속철도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특히 고속철도 정책에도 맞지 않는 것은 역간 적정거리가 47km정도 되는데 오송에서 공주역이 20km 밖에 안 되는 지점으로 세종역을 신설한다 해도 불과 2분밖에 차이가 안나 시간·비용 면에서 전혀 실익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충북도·충북도의회, 청주시·청주시의회가 시민·정치권과 하나가 돼 이해찬 대표 등이 추진하는 KTX세종역 신설을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또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도청 입구에 감사위원 15명을 치켜세우는 배너 광고판을 세워도 민들의 자존심을 저버린 과잉 의전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정책복지위원회는 9월 19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충청북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했다.



정책복지위원회는 10월 12일 해원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설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행정문화위원회는 7월 11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사항과 기타 현안들을 협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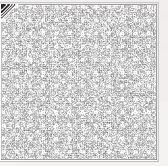
행정문화위원회는 「2019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와 관련하여 충주의료원 등의 현장을 방문해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9월 17일 충북테크노파크를 방문해 현황을 듣고 시설을 점검한 후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당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10월 18일 제주도에서 자체간담회를 실시한 후 제주축산진흥원을 방문해 현황을 듣고 관련 시설들을 살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10월 18일 직무연찬회 기간 중 경북소방본부 청사를 방문하여 119종합상황실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9월 17일 제주도 생활환경과를 방문해 클린하우스, 재활용도움센터 운영현황 등을 듣고 의견을 교환했다.



교육위원회는 10월 24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학교놀이문화 관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여 학교놀이문화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도출했다.



교육위원회는 9월 17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자체 간담회를 갖고 도의회 공무원외연수 관련 사항들과 기타 현안을 협의했다.



충북도의회는 9월 13일부터 9월 14일까지 이틀간 옥천 장령산 휴양림에서 전체의원 연찬회를 실시해 의정역량을 높이고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천년의 사랑, 농다리 건너 초롱길을 걷다!



이 상 식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뜨겁다! 나는 무슨 배짱으로 이 더위와 대거리를 하러 이곳을 찾았을까? 이런 나의 푸념에도 농다리는 지친 기색없이 그곳에 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빼앗긴 듯 미련 맞게 천년을 버텨 온 우직함. 그의 한결된 마음이 이 따위 폭염을 신경쓰겠냐만 나의 미련한 오기는 또 어떡하나.

비록 지난 천년동안 마음을 헤아릴 수 없겠지만, 그에게 또 다시 다가올 천년의 흐르는 세월에 내 마음도 보태보면 어떨까. 나와 그의 인연이 많지 않았던 탓에, 난 그에게 온전한 마음을 보태지 못할까 두렵다. 하지만 겹겹의 인연을 맺듯 조심스레 그에게 다가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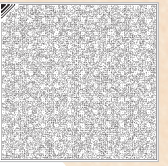
내가 찾은 농다리는 특이하다. 분명 외형의 다름을 넘어 교각 하나하나에도 천년을 버텨 온 삶의 질곡이 그대로 담겨 있을 것이다. 교훈이 있는 다리. 어떠한 고난과 외풍에도 자기의 역할과 자리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준다. 언제나 변함없는 우직한 그의 허리에 조심스레 발을 디더 본다. 농다리는 하천의 변과 변을 잇는 평범한 다리가 아니다. 나는 내 인생의 한쪽 면을 채우고 다른 면을 채우러 그를 건넌다. 새로운 도전을 위해, 또 다른 나의 사랑을 위해 속살 드러낸 그의 등허리에 살포시 다리를 얹는다.

농다리는 소박하다. 현대의 이름난 여느 다리처럼 웅장함도 없다. 덕수궁 돌담길 지나 건너는 금천교처럼 정교함도 없다. 하지만 손주 손 붙잡고 논일 나가는 촌로에게 길이 되듯, 우리가 꼭 건너야 할 인생의 길이다. 그래도 그를 건널 때면 사람을 힘들게 하는 시멘트 다리의 복사열은 없다. 오

히려 시원하다. 그는 자신의 등허리에 올라앉은 모든 이들에게 편안함과 배려, 서로 아끼는 사랑을 일깨워준다.

농다리를 건너 용의 허리를 잘랐다는 용고개(살고개)에 오르니 넓직한 초평호가 눈에 들어온다. 초롱길은 초평저수지의 한쪽면을 따라 걷는다. 때문에 시원한 강바람은 기본이고 산에서 내려오는 풀내음이 비릿한 물내와 교대로 후각을 자극한다. 물론 오감만족을 위한 초롱길에서는 볼거리도 적지 않다. 초롱길을 걷다보면 해양스포츠를 즐기는 한무리가 마치 학익진을 펼치듯 호수 위에 떠있다. 여유있게 걷다보면 오래지않아 하늘다리에 다다른다. 현재 초롱길은 1.5km에 불과하다.

그러나 초롱길은 갔던 길을 다시 돌아와야 한다. 때문에 나무데크로 잘 만들어진 문명의 혜택에 질릴 때쯤 농암정으로 가는 샛길로 빠져 본다. 가파르게 올라가다 보면 인공의 길이 아닌 흙길이 나온다. 이제 무언가 제대로 된 길을 걷나 생각하며 먼 경치의 호수를 배경으로 산길을 걷는다. 길가에 주빚거리며 서 있는 강아지풀 하나 베어물고 야생화와 대화하며 농암정으로 오른다. 괜찮다. 농암정에 오르면 주변의 모든 산이 친구고 초평저수지의 푸른 물이 이웃이다. 농암정에서 내려다 보이는 농다리는 단아하다. 오랜 세월을 지내온 인고의 표정이 깃들여 있다. 고인 듯 새찬 물줄기에 맞선 그가 새삼 커보인다. 그의 슬픈 듯 의연한 모습을 바라보며, 그의 기다림이, 그의 사랑이 꼭 이루어지길 내심 기대해 본다.



균형발전, 재정분권을 향한 실천은 계속되어야 ...



오영탁 의원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제 지방분권과 실질적 지방자치의 실현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방의 역할과 지방자치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고, 당면한 국가적 난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

최근 정부가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한다고 한다.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2022년까지 7대 3으로 개선하는 재정분권 방안도 확정했다. 문재인정부의 핵심 공약인 지방분권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기본원칙은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기능과 재원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함으로써 22년까지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것이다.

그리고, 재정격차가 심화되지 않고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역 간 세원 불균형에 대한 보정장치를 마련하여 어느 지역도 현재보다 불리해지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재정분권의 성과가 실현되도록 2019년부터 시행하는 1단계 추진방안과 지역의 자율성 강화와 균형발전을 위하여 근본적인 제도개편을 추진하는 2단계 추진방안으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하지만 지방소비세율을 올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하면 일부 지자체는 재원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7월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받은 연구용역 자료를 보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대3으로 바뀌면 18개 기초자치단체는 재원이 오히려 감소한다.

충청북도는 ‘지방세 증대의 역설’ 현상이 나타나는 곳은 없다.

다만, 단양군은 국세,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증대 시, 지방소득세는 2016년 48억원에서 90억원으로 증가하나, 교부금 증가액을 포함해도 교부세가 40억원 가량 감소해 자주재원 순증감액은 40억원 정도 증가하는데 그친다.

반면, 청주는 순 재정 증대효과가 각각 2100억원으로 수 천억원의 재정증대 효과가 나타난다. 이는 법인 등이 밀집해 있어 현재 지방소득세 세수가 풍부하기 때문이다. 결국, 청주시처럼 상대적으로 재정력지수가 높은 지자체는 수 천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증대되고 단양군, 괴산군, 보은군, 영동군 등 재정력지수가 낮은 지자체는 순 재정 증대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결국 지방세 비율이 높아져도 ‘지방세 증대의 역설’ 문제 등 지역균형발전이 저해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정교부금 분배기준 정비, 공동재원 신설 등 균형발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관련법률 개정 등 후속조치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균형발전, 재정분권을 향한 실천은 꾸준히 계속되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지역 균형발전 체계를 굳건히 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재정분권의 낙수 효과가 지역별로 고르게 나타나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해 국민이면 누구나 어디에 살든 똑같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충북도의회는 항상 열려있습니다”

청원안내

■ 청원서 제출방법

- 도의회에 청원을 하려면 도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 제출
- 청원서에는 청원인 주소·성명(날인)
- 청원서에는 청원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음
-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청원 소개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청원서 문의

- 의사담당관실 : 043)220-5151~5155

민원안내

■ 진정서 등 제출

- 진정서는 청원서 외에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인터넷 민원 등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함
- 진정서는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진정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

■ 제출방법

- 우 편 : 2851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의사담당관실
- 인터넷 : <http://assem.cb21.net>의 「진정/민원」에 글쓰기
- 팩 스 : 043)220-5159

방청안내

■ 방청권 교부

- 의회사무처에서 교부받은 방청권에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등을 기재하여 신청
- 방청시 방청인이 지켜야 할 사항 준수

■ 방청권 신청

- 의사담당관실 : 043)220-5155



충청북도의회

<http://council.chungbuk.kr>

- 충청북도의회 인터넷방송 : <http://tv.council.chungbuk.kr>
- 트 위 터 : https://twitter.com/chungbuk_assem
-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cbassembly>

